정신문화연구 2004 겨울호 제27권 제4호(통권 97호) pp. 39~72.

企劃論文

안재홍의 민족통일노선과 신민족주의

임 형 진*

Ⅰ. 서론
Ⅱ. 민족통일노선과 민족주의
Ⅲ. 민세의 민족통일노선
Ⅳ. 신민족주의 국가건설론
Ⅴ. 결론

Ⅰ. 서론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1945년부터 정치사상은 큰 혼란과 다양성의 시기를 맞이했다. 갑자기 닥쳐온 해방은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 건국의 기본이념이 필요해졌고 이에 대한 백가쟁명식의 정치사상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동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사상의 유입은 이것을 더욱 부채질하여 급기야 정치사상 홍수의 시대가 되었고 대중의 힘이 동원되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시기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정치사상으로 민족공동체가 행복과 번영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투쟁을 거듭했다. 기득권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동체건설을 주장하는 보수주의, 혁명의 완수를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민족지상주의적인 극우적 민족주의에서 민족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민족주의까지 그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대우교수, 한국정치사상 전공.

리고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제3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일군의 사상가들, 또한 그들이 모두 수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상 등등이 그 주역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냉전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국가형성의 논리가 민족주의적 공동체형성의 요구보다도 우월한 힘으로서 역사를 통하여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현대사에서 민족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홉스봄 등의 부정[1]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여전히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2] 그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민족주의 이외의 어떠한 해결책도 지금까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거나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기 민족주의 정치이념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의 국가건설론에 대한 추적은 우리 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책의 모색이라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해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해방 후 한민족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좌우파의 사상적·계급적 갈등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단결된 민족역량을 토대로 해서 외세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을 극복하여 자주적이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제에 가장 성실하게 임하였던 세력은 '중도파'로 불리는 민족주의적 중도세력이었다. 이들 중도파들은 한편으로는 좌우합작을 통하여 결집된 민족역량을 형성하려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협조'를 통하여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이 가능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가려 하였다.[3]

이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전민족적 공동체의 안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온 몸으로 해방정국을 헤쳐 나간 대표적인 인물이 민세 안재홍이었다. 그는 이미 일제 하에서 9차례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한민족의 자존을 지킨 민족의 지도자였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반탁운동의 선봉으로, 미군정의 민정장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좌우합작과 혼란극복을 위한 국가건설에 진력했었다. 비록 그의 이상은 현실의 높은 벽에 의해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

1) 오늘날 민족주의 연구를 대표하는 서구의 Eric J. Hobsbawm이나 Ernest Gellner, Anthony Smith, Benedict Anderson 등의 부정적 경향은 일관되고 있다.

2) Anthony D. Smith,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1995, Introduction.

3) 정영훈,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이론」,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3호(1992), 163~164쪽.

'민족통일노선'으로 또 그의 사상은 '신민족주의'로 여전히 한국정치사상의 이념적 원형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 글은 민세의 노선과 사상을, 특히 해방정국에서의 활동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가 가졌던 사고의 시대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갈등극복의 정치질서 모델로서의 의미를 발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민족통일노선과 민족주의

민세의 이념과 노선은 민족통합과 통일을 통해 이상적 정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양한 이념적 분파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민족주의야말로 민족공동체의 이익을 포괄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모든 다양한 정치이념과 쉽게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상 세계사 속에서 민족주의와 접목되는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은 좌파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서 극우적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걸쳐 있다.[4] 근대사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숱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면서도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해방정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20세기에 경험한 민족적 수난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를 다른 어떤 이념보다도 우선하는 지상명제로 파악해왔다.[5]

흔히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듯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해 왔다. 민족주의는 현대 세계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하나이지만 공통된 강령이나 고유한 이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민족주의란 무정형적인 민족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대외적 자주성, 경제적 자립, 대내적 민주주의를 그 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방법까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족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각 민족과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어 시대적 요구를 수행해 왔다.

---

4)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 2000), 53쪽.
5) 최장집, 「한국민족주의의 특징」,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신서, 2001), 172쪽.

실제로 민족주의는 서구에서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결합되어 대외적 팽창주의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편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당한 제3세계에서는 그것에 대항하는 저항적 의미로서의 민족주의가 확대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한스 콘은 지난 세기를 민족주의의 세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반도는 이러한 세계주의와 민족주의가 교차하는 정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1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들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 지구적으로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민세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절대성을 신뢰하지만 세계의 영향력과 중요성도 인정하기에 그는 양자의 끊임없는 조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호가 '민족에서 세계로'의 의미를 가진 '민세'인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 개방된 문화민족주의야 말로 민세가 평생 추구한 핵심적 이념이다. 따라서 민세의 민족주의는 민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초가 된다.

민세는 근대산업혁명 및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론화된 서구의 민족주의 개념에 대하여, 민족주의는 각 민족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함께 출현한다는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의식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된 것이니, 근대자본주의시대의 산물이 아니다"[6]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민족의 순수한 우리말 형태인 "겨레"에 대한 어원적 뜻풀이를 통해 우리의 민족사상 또는 민주주의원리를 설명했다. 즉 "겨레"는 한편으로 "결리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 "안으로 구성원끼리 잘 조직, 편성되어 단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겨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 "외부세력과 경쟁하고 투쟁한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민족을 첫째, 동일혈연체라 하여 공통한 조상에서 물려받은, 같은 핏줄을 계승한 생존공동체로, 둘째, 일정한 지역, 일정한 공간에서의 협동체인 생활을 하였음에 인하여, 또는 하고 있음에 의하여, 자기의 독특한 형체로 만들어진 이른바 지역공동체로, 셋째, 운명공동체로서의 생활공동체 즉, 공동문화의 유대에서 결속되고 성립된 운명공동체라고 규정한다.[7] 그러나 이러한 민세의 민족은 결코 국수

6) 민세의 저서는 『민세안재홍선집』으로 지식산업사에서 1981부터 전8권을 목표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이하는 줄여서 『선집』으로 약한다. 『선집』2,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16쪽

주의나 쇼비니즘 같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1945년 발표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서 히틀러의 독일제국과 일본의 왜곡된 민족 우월의식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민족주의는 한 국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방략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는 같은 글에서

> 조선은 그 혈연의 순수 단일한 점에서, 그 동일지역인 오천년 조국을 지키어 온 점에서, 동일언어·동일문화로써 강고한 운명공동체로서 존속하는 점에서, 단연 독자적 생존협동체로서의 조국을 재건하여 국제 협력의 일분담자로 될 권리가 있다.[8]

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민세는 "겨레"의 민족사상 그리고 한민족의 문화, 언어, 운명, 생활공동체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한민족이 하나의 독립된 통일국가로 전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9]

또한 민세는 한민족의 국체와 정체는 일국민, 일민족의 자연이고 또 역사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국 "그 독특한 국민성과 민족성에 의하여 건조되는 것이니 그는 자연적 경역과 그 인민의 성격을 형성하는 역사의 전통을 기축으로 하여 점층적으로 생장·집결되는 것이고 일조일석에 인공적으로 급조함을 허치 않는다"[10]고 주장한다. 여기서 특히 민세는 각 민족의 고유 문화를 민족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 각자의 민족은, 그 자체가 고유한 문화를 가진 까닭에, 어느 민족의 현재의 사태와 및 그 전도와를 형성함에 당하여는, 반드시 그 민족의 과거가 영향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있는 한편, 각자의 민족의 역사가 있는 한편, 각자의 민족의 역사가 있는 것을, 둘 다 잘 인식함을 요한다. 어느 인민이거나 결코 撥茂한 경지에서 거연히 유를 창조할 수 없으므로, 일 인민에게 적정 타당한

---

7) 위의 글, 16~17쪽 참조.
8) 위의 글, 19쪽.
9) 정윤재,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 국가론: 정치적 비젼과 실천전략」, 한국정치학회, 『정치리더쉽 기획학술회의』 발표 논문(2000, 9), 5쪽.
10) 『선집』2,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20쪽.

> 사회도덕의 구현으로서의 진정한 입법은, 반드시 당해 인민의 과거 문화의 총화인 역사의 소산이어야 한다.[11]

그렇기에 민세는 문화의 전통을 거세한 합리주의적인 인공적인 국제추수주의는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개별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발양되는 것이야말로 전국제적 협동이라는 과제에 오히려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정치학자 헤르더(J. G. Herder, 1744~1803)가 이상적 국제질서로 상정한 문화민족국가의 다양한 형태와 유사하다.

독일의 헤르더는 민족을 유기체론적 입장에서 해석해 민족형성의 역사성에 주목한다. 그는 민족을 역사 속에서 민족정신과 민족혼을 보지(保持)하면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전수해 온 주체로 상정한다. 따라서 그에게 민족은 절대적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 각국의 민족주의가 휴머니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치적으로 완비된 민족 개념을 헤르더는 결코 여타 민족에 대한 증오와 연결시킬 수 없었다. 모든 인간의 공동 유대감으로 형성된 휴머니티 공동체에서, 각 민족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어야한다는 혁신적인 이념을 그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휴머니티라는 목표와 함께 민족의 문화적 단결을 강조하는 모든 개별 민족을 포괄하는 보편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다양성과 단일성의 문제를 상당히 역설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 인류의 동포애라는 단일성은 각 민족의 문화민족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와 휴머니티를 달성하는데 하등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와 휴머니티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12]

민세의 민족관은 이러한 헤르더의 민족관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기에 그는 내 민

11) 위의 글, 21쪽.

12) 헤르더는 다양한 민족의 존재를 정원에 비유한다. 정원에서는 다양한 꽃들이 다른 꽃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정원에서는 다양한 꽃들이 평화롭게 함께 어울려 피어서 공존하고 있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이다. 각 민족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민족성을 타민족의 민족성 발현을 저해함 없이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민족문화간의 상호교류뿐만 아니라 민족간의 투쟁도 민족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Isaiah Berlin, *Against the Current: Essays in the History of Idea*, New York: Viking, 1979, pp. 11~12.

족의 성장이 남의 민족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타민족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시해 앞으로 형성될 새로운 민족국가는 반드시 엄정한 국민적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해방을 맞이한 민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한 민족의 통합이었다. 해방 조국은 이것이 이루어 진 뒤에라야 국제적 일분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세는 극우적인 "천로한 국제추수주의자"와 "극좌적인 신사대주의자"[13]들의 내부적 "계급투쟁" 노력을 반대하고 한민족의 독립국가형성을 위한 "민족투쟁"을 지지하였다.[14] 물론 민세 역시 역사상엔 민족간 대립만이 아니라 계급간의 대립도 엄연히 존재했음을 인정한다.[15] 그러나 해방정국에서 조선의 상황은 민족투쟁에 진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해방정국의 주요한 사건에서 마다 두드러지게 민족통일노선이라는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났다. 민세가 민족통일노선을 가질 수뿐이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해방 직후의 혼란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와 폭력적 정치투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좌·우 정치지도자들 간의 통합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신생조국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전민족적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고 확신했다. 이와 같은 민세의 민족통일노선은 해방정국의 주요한 4 사건들-해방,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민세의 노선과 이념이 보다 확실히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민세의 민족통일노선

1. 해방과 민세

일본의 패망을 8월 10일경 단파방송으로 파악한 조선총독부는 재한 일본인의 안전귀국이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신들의 조

13) 『선집』2, 「신탁통치반대선언」, 82쪽 참조.
14) 정윤재, 앞의 논문, 9~11쪽 참조.
15) 『선집』2, 「한민족의 기본진로」, 363 쪽

선통치역할을 대신할 인물로 몽양 여운형을 선정했다.[16]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총독부의 협조 하에 건설될 수 있었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각종 사회적 유산들이 밑으로부터의 요구 폭발과 광범위한 연대를 유발하는 사회혁명의 열기 그 자체였고 건준이 그 열기의 핵심에 위치했다. 결국 민중들의 높은 지지는 건준을 사실상의 정부로 변화시켰다.[17] 칩거 중 해방을 맞은 민세에게도 일제는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 1944년 봄부터 일본인측에서는 시국을 비관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유리하게 회전시켜 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어 조선측 지도층 인물들에게도 상당한 획책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고 여운형·송진우 및 조만식·홍명희, 그리고 필자인 나 등을 남아 있는 비협력 지도 인물로 보아 무슨 방식으로든지 사용하려는 것이 그들의 뱃속이었다..... 오직 몽양 여씨와 나만을 최종까지 투옥될만큼 대중과 관여된 일이 있다고 인정되었고(민세는 1943년 2월에, 몽양은 7월에 각각 출옥하였다), 따라서 피방의 추구 끈질김에서 그들을 접촉하면서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총독으로부터 군사령관, 정무총감, 경무국장, 헌병대의 간부, 동경으로부터 내방하는..... 국회의원 등 등이 그 상대였던 것이다.[18]

이에 대하여 민세는 일본이 조선에서 퇴각하는 때에 한·일 양민족사이에 큰 마찰을 일으켜 피차간에 대량 유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부터 군민 각계에 철저

---

16) 김준연 등은 총독부에서 몽양을 만나기 전에 먼저 고하 송진우와 교섭했지만 고하가 끝까지 중경의 임시정부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협조거부를 했기에 부득이 몽양과 교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당시 총독부는 한반도는 소련군에 의해 점령될 것으로 파악했고 이미 소련군은 8월 8일 밤 토리를 공습하는 것을 시발로 북쪽땅으로 남진 중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얻은 것은 8월 18일이었다. 결국 그들이 여운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맑시스트였고, 조선인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으며 그러한 이점이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승리자인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총독부로서는 우파이자 친일행적이 명확했고 조선인의 지지도에 있어서도 몽양과는 비교될 수 없었던 고하에게 치안유지 등을 교섭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17)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김자동 역, 『한국 전쟁의 기원』(일월서각, 1986).

18) 『선집』2, 「8.15 당시의 우리의 정계」, 465~470쪽.

한 훈련을 시켜 두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신들이 퇴각의 즈음에 살육을 일으키게 되어서는 조일 양민족은 새로이 영원한 원수가 되고 말 것이다. 당신들은 무기를 가졌으니 조선인이 더 많이 죽겠지만, 지방에서는 조선인의 떼가 많은 것만치 일본인의 손해도 상당 많을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니 그 대책으로 민족 자주·호양 협력·마찰 방지의 3원칙을 제시하고 '우리들 일파에게 일정한 언론과 행동의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였다.[19] 이러한 민세의 주장에 일제는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치안 유지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해방을 맞은 것이다.

건준 건설을 추진하던 몽양에게 민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었다. 특히 몽양이 가진 좌익적 색채를 여과하기 위해서도 그는 민세와 같은 온건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절대적인 국민적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몽양의 제의에 민세는 적극 응했다. 민세는 시급한 신생독립국가를 만드는데 이념은 중요치 않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결합은 가능했다. 몽양이 민세에 얼마나 의지했는지는 그가 부위원장임에도 건준의 성립을 알리는 첫 방송을 그에게 맡겼음으로도 알 수 있다.

> 지금 해내 해외 삼천만 우리 동포에게 고합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급격히 변동하고 있고 특히 조선을 핵심으로 하는 동서의 정세가 급박하게 변동하는 이 때에, 우리 조선 민족으로서 대처해야 할 일이 긴급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들 각계를 대표하는 동지들은 여기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생 조선의 재건설 문제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 공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20]

방송의 내용에서 벌써 민세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키 위해 신정부 수립의 방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건준 참여 당시 민세의 의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

---

19) 위의 글, 470쪽. "나는 '개인으로서는 일대 모험인 것을 잘 아는 바이나'라고 전제하고, 양민족과 동아의 장래라는 것을 한 번 대담하게 역설하기로 한 것이다. 여운형 씨도 항상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었다."

20) 『선집』2, 「해내·해외의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 10~12쪽. 연설은 1945년 8월 16일 오후 3시, 6시, 9시 세 차례에 걸쳐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제의 붕괴 및 퇴각에 즈음하여 조선인의 민족적 자중으로써 일제 군벌의 잔인한 단말마적 발악에 의한 무용한 대량 유혈을 방지하자 함이요, 둘째, 현존 시설과 기구·기계·자재 및 계획 문서 등을 완전히 보관 관리하여 독립정부에 인계 활용케 하자 함이요, 셋째, 그 독립 정부는 중경의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의 정통적인 지도 기관인 만큼 중경 임정을 최대한으로 지지하여 해내외 혁명 세력으로써 적정한 보강 확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21]

신생독립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건준에는 초기에는 온건 좌우파가 모두 참여했다. 그래서 초기의 건준은 스스로의 성격을 건국을 위한 준비 기구로 파악하고 치안의 확보, 건국을 위한 민족 총역량의 일원화, 교통·통신·금융 및 식량 대책의 강구 등 실무적인 역할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역할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22] 건준이 수립된 후 얼마 안 가서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전국에 설치되었다. 13개도에는 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말까지는 전국 145개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몽양이 주도하는 건준에 불만을 가진 우파계열에서는 민세에게 보다 많은 우파가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이에 민세는 마침 8월 18일 여운형이 테러를 당하여 일주일을 정양하게 된 기회에 자신이 위원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좌우의 대립된 의견을 절충하다가 우파에 편중된 135인의 확대 위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좌익의 비난에 여운형은 확대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세와 몽양 사이에 금이 갔고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23]

결국 건준에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민세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치자 그는 지도부를 사퇴했다. 당시 그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와 여의 처지」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건준은 조선 민족 해방운동 도정에서의 초계급적 협동 전선으로

21) 『선집』2, 「민정장관을 사임하고」, 259~260쪽

22) 김광식, 「해방직후 여운형의 정치활동과 건준, 인공의 형성과정」, 『한국현대사』 I(열음사, 1985), 192~193쪽

23) 또한 강낙원, 유억겸 등 우익 일파가 보안대를 조직하여 건준의 치안대와 합류할 것을 제의하여 민세가 허락하였으나, 몽양은 그들이 치안대의 장권 부하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또 민세와 몽양의 불화 원인이 되었다. 한국사학회 편, 「민세 안재홍」, 『한국현대 인물론』(1)(을유문화사, 1987), 159쪽

명실 합치한 과도적인 기구이어야 한다. 건준은 독자로서의 정강을 가진 정당도 아니요, 그 운영자 자신들의 조각 본부도 아닌 것이요, 따라서 다년간 해외에서 해방 운동에 진췌(盡悴)하여 오던 혁명 전사들의 지도적 집결체인 해외 정권과 대립되는 존재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당면한 임무로서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와 대중 생활의 확보와 신국가 건설 준비의 기술적인 주비(籌備)로서 각 방면의 전문적인 대책의 연구와 지재, 자료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공작 등등" 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든 것이 그의 의도와 배치되므로 인책 용퇴한다며 주장했다.[24] 지도부의 갈등을 봉합코자 건준은 9월 4일 사퇴안을 반려하였으나 민세는 끝내 사퇴를 관철하여 건준을 떠났다. 건준에서의 퇴진을 민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 나는 건준이 성립된 8·15당일부터 철야하는 동안 거의 38시간을 통하여 좌방 제씨가 나의 의도하는 건준과는 딴판으로 각각 독자적인 의도에서 잠행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본 까닭에 16일 조조이면 용퇴할 것을 내심 결의하였으나, 위원장 몽양 여운형씨 외에 정백 씨 및 다른 요인이 사정을 설명하고 협동을 역설하므로 나는 내심 품었던 사의를 뒤집어 최후의 순간까지 내뜻을 고집하고 3항의 취의를 관철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몽양은 대체로 공당측의 진언에 이끌리고 민족주의자로서는 이 일에 참획한 자 자못 빈곤하였을 뿐 아니라, 나는 중의를 배제하고 민족주의자의 대량 참가의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계하고 민족주의자의 보이코트로써 협동은 결렬되었다.[25]

좌우 통합을 통한 신생국의 기초를 다지고자 했던 민세의 의도는 건준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준에서 공산당 계열의 강화와 민족주의 계열의 불참은 민세의 구상을 어긋나게 한 것이었고, 결국 민세는 건준을 탈퇴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민세는 처음부터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협동이야말로

---

24) 민세는 물러나면서 건준이 앞으로 첫째, 초계급적, 초당파적 견지에서 각계 세력을 총결할 것과, 둘째,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선집』2,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여의 처지」, 13~14쪽

25) 『선집』2, 「민정장관을 사임하고」, 260쪽.

민족해방의 완성이며, 민족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이며, 극우나 극좌를 배제한 진보적 민족주의 노선에 의한 새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건준에 참여하면서도, "민족주의자의 지도자가 제1선에 나서도록 하고, 공산계열은 차라리 차위에서 협동하기를 제안"[26]하였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할 때에도 박헌영 등과 수 차례에 걸친 회동[27]을 하면서 민주주의 민족독립국가의 완성의 시급함을 들어 공산주의자의 제2선으로 후퇴를 종용했다.

건준을 탈퇴한 민세는 민족통일노선을 주도할 중도적 정당의 필요성에 의하여 조선국민당의 창당에 착수했다. 국민당은 박용희(기독교)의 사회민주당과 명제세(항일운동)의 민중공화당, 자유당, 협찬동지회, 근우동맹 등 6개 정당과 사회 단체가 합동하여 1945년 9월 24일 국민당을 결성하였다. 국민당은 그야말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권력적 야심의 정당이 아니고 오로지 민족통일운동을 위한 정치훈련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통일전선형성에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민세

해방정국에서 본격적인 좌우 이념대립이 전개된 사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국내에 알려지면서였다. 945년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 모인 미·영·소 3개국의 외상들은 회담 마지막 날인 12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8] 이 결정은 당시 38선으로 분단된 채, 미·소군에 의해 각기 군정이 실시되고 있던 한국에서, 그러한 분단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식민유산의 청산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특히, 정권획득을 위한 제정파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남한 지역의 혼란까지도 일소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도 우선 남·북한의 민주주의적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신탁통치문제는 수립된 그 임시정부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신탁통치의 기간에 있어서

26) 위의 글, 261쪽.
27) 위의 글, 264쪽.
28) 송남헌, 『해방 3년사』I(까치, 1985), 247~248쪽 공동성명문 참조.

도 '최고(at most) 5년간' 이라는 의미는 '적어도(at least) 5년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물론 임시정부와 협의하는데 따라서 최고 5년간 혹은 단 하루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건대 어쩌면 이 제안은 가장 합리적인 독립국가 달성의 최선책일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거두절미된 채, 오직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실시된다는 내용만이 확대되어 국내에 전달되었다. 해방정국의 첫 단추는 이렇게 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신탁통치 소식이 전달된 남한 지역은 정치지도자나 국민 모두가 커다란 충격 속에 빠진다. 그러나 사실은 냉혹한 국제정치 하에서는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것을 감지 못한채 미군정 당국의 부인 발언만 믿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정치지도자들의 무방비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의 분위기는 정당을 초월해서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자연 발생적인 반탁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스크바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 있었다. 그래서 탁치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감정에 선봉에 섰던 그룹은 홀대 속에 귀국한 중경의 임시정부 세력이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민족의식에 철저했던 이들에게 독립된 조국에 대한 탁치 운운은 식민상태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었다.

민세에게도 이런 의식은 공유되고 있었다. 그래서 민세는 임정중심으로 탁치반대국민총동원 위원회가 조직되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권동진, 부위원장에 안재홍, 김준연이 선임되었지만 권위원장의 노환으로 실질적 업무는 민세가 도맡았다고 한다. 탁치반대국민총동원 위원회는 거족적인 반탁운동에 돌입했고 그 동안 외세에 의해 권력에서 소외된 임정은 민족의 이름으로 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29] 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4대국에 대하여 임시정부

29) 반탁에 참여한 각 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들은 12월 29일 오후에 안재홍의 사회로 별도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가 즉각적으로 주권행사를 단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의 전국지부 결성을 결정하였고 이 조직체를 중심으로 임정이 확고한 국가권력을 수립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 당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으며 각 정당대표자회의가 같은 날 종로의 YMCA에서 개최되어 임정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반탁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진덕규, 「김구의 임정을 거부한

주석의 명의로 신탁통치 절대 반대의 전문을 발송하였으며 경찰 및 전국 행정기관을 전부 임시정부의 지휘 하에 둔다고 선언하였다. 좌우를 막론한 각 단체는 일제히 신탁통치 절대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여 31일부터는 철시, 대시위가 일어났다. 반탁총동위가 전국파업령을 내리자 즉시 군정청의 한인직원들은 총사직·총파업에 들어갔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반탁저지를 위한 미군정의 모호한 입장 정리와 찬탁으로 돌아선 좌익의 행동으로 인해 반탁운동이 제동이 걸리자 민족통일노선에 충실했던 민세는 어떻든 전민족적 차원에서 반탁운동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1946년 1월 6일, 탁치 문제로 인하여 분열된 국내 정국을 수습하고 다시 협동의 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국민당·인민당·한민당·공산당 등 4개 정당과 임정 대표들은 철야 토의 끝에 탁치안은 임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해결한다는 내용의 '4당 코뮤니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민당 등이 신탁 통치 반대의 정신을 몰각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4당 코뮤니케가 실패하였지만 민세는 단념하지 않고, 재차 국내 정치 세력의 단합을 위하여 고심 분투하였다. 즉 민세를 중심한 국민당은 이승만의 '비상국민회의'와 김구의 '비상정치회의'를 연합시킴으로써 건국의 도정을 앞당기려 노력하였다. 민세가 제시한 그 해결방안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당파 관계를 고려하여 인선한 후 그것으로 비상 국민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승만·김구 양 영수에게 일임, 그 지명에 의하여 최고정무위원회를 구성, 통일정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구를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이 찬성하였으나 임정계 내의 좌파가 이탈하여 좌우 합작은 또 한차례 실패하였다.[30] 백범 역시 민족의 장래를 위해 첫째, 비상정치회의 추진, 둘째, 좌익과의 협상을 통하여 그들을 비상정치회의와 과도정부수립에 참여하게 하는 것, 셋째, 반탁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국민적 지지를 임정으로 표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백범은 좌파와의 연합을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우파일색의 비상정치회의(후에 비상국민회의, 민주의원으로 흡수)를 만드는데 그치

미군정」, 『한국논단』 1992년 5월호, 124쪽

30) 정윤재,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민세 안재홍 평전』(한울, 2002), 113~115쪽 참조, 민세는 비상국민회의의 주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고 만다.

한편, 찬탁진영인 좌파에서는 비상정치회의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결성해 찬탁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는 독립정부수립운동세력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전에도 좌우파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이 노출되었지만 신탁통치안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완전히 갈라져 급기야 민족의 분열로 치달렸다. 이북에서는 이미 2월 14일 민주의원 설치보다 앞서 2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정부 형태화되었다. 민주의원의 출현을 남조선 단독 정부 성립으로 보아 그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세는 반탁을 주장하였으나 극우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반탁 사상은 이미 국민 사이에 널리 침투되어 있으나, 정부가 없이 그저 민간인의 투쟁만으로는 국제 여론에 반영은 주겠지만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민족적인 실망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민세는 "반탁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 말고 미·소 공위를 성립시키어 그에 인하여 정부 성립된 후에 실천으로써 탁치를 반대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고, 이 점 김규식 박사와 나의 견해는 일치되는 것"이라고 했다.[31] 여기서 그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는 신탁보다는 임시정부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자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일국의 지배야말로 독립국가 건설에 최대 장애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국독점 지배를 반대하고 미소 공위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민세의 민족통일노선은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대 화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 민세는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김구가 주도한 전민족적인 반탁투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문을 상세히 살피고, 당시의 국제정세를 판단한 다음, 민세는 일단 한국민은 당시의 유일한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관련 강대국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일단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요 관심사인 신탁통치문제는 "민·공협동"으로서의 좌우합작을 성사시켜 일단 통일임시정부를 세운 다음,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신탁을 반대하는 민족의 단결되고 강력한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31) 한국사학회 편, 앞의 책, 174~175쪽 참조.

이후 민세는 두 가지의 일을 추진하는데 첫째가 언론 활동이다. 1946년 2월 26일, 민세는 한성일보를 창간하여 사장이 되었다. 과거 일제 하의 항일 필봉을 휘두르던 모습으로 돌아 온 것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그는 " 천학비재한 나로서 어느덧 정치적 파동 속에 들어 영일이 없는 터에...국내적 국제적 허다한 악조건의 밑에 조국건설이라는 확고한 대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만치...이 역사적 과제요 시대의 요청이요 대중의 희구인 지대한 사업에, 주장·지지·고취·선양의 일방의 임무를 부담키로 하는 바입니다. 귀중한 것은 신조와 주의와 정견과를 굽히지 않은 채 극명하게 시조의 저앙(低昻)에 책응하는 것입니다"[32]라고 하여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필설로 굽히지 않고 해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른 한편 민세는 1946년 3월에는 같은 민족주의계 합당 운동에 따라 국민당을 임정의 정통 정당인 한국독립당에 통합시켰다. 민세는 한독당의 중앙 상무 위원 및 훈련부장에 피임되었다. 민세는 국민당을 창당하였을 때 그를 보고 당수라고 지칭하면 "나는 당수가 아니니 해외의 혁명 영수들이 들어오시면 어느 분이든지 정말 당수로 추대하고 일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재삼 언명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한국독립당이 그 역사, 그 구성인물로써 최대한 대표적인 당인 것으로 인정되어, 일찍부터 국민당과의 합동을 내의'한 결과[33] 두 당의 정강 정책의 대강이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3월 20일에 드디어 합당 선언을 발표하였다.[34]

3. 좌우합작운동과 민세

남한 내에서의 극렬한 찬·반탁의 노선대립속에서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공위에 임하는 소련측은 미소공위의 과업이 민주주의의 제반 과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중적 토대

32) 『선집』2, 「사장 취임의 사」, 99~100쪽
33) 『선집』2, 「백범정치투쟁사」, 438쪽
34) 한국사학회 편, 앞의 책, 175쪽.

위에서 창설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비해 미국측은 좌우익에 편향되지 않고 언론, 집회, 신앙, 출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미소공위에 임할 것을 밝혔다. 소련측의 입장에는 모스크바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미국측의 입장에는 이에 반대할 자유도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같은 기본입장은 미소공위 전개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양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제1차 미소공위는 5월 7일부로 기약 없이 유산되었다. 탁치를 둘러싼 미소간의 첫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자 다급해진 것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다.[35] 미국으로서는 다음 번의 대소협상을 위해 새로운 전술이 필요해진 것이다. 좌우익 대립구도의 완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의 획득과 남쪽을 대표할 통합기구의 구성이 그것이었다. 미국은 극우, 극좌가 아닌 제3의 집단을 지원함으로서 북한의 인민위원회 같은 한국인들로 구성된 과도기적인 비행정적 내각 및 입법기구를 창출하고자 했다.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합작을 민족통일노선의 중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던 민세는 당연히 좌우합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서울 중앙방송을 통하여 합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좌우합작이 어찌해서 필요하고 또 긴급한가. 그것은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어야 우리의 건국 사업이 비로소 궤도를 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 까닭입니다. 고쳐 말하자면 이렇게 긴급한 임시 정부를 만드는 데는 좌우 합작에 말미암아 민족 총의를 한데 묶는 것이 선결 요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36] 이어서 다시 합작의 방법을 제시하고, "좌우 합작은 반드시 극좌·극우를 다 배척하고..... 대중 공생·만민 공화하는 신민주주의의 국민 국가를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37]라 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좌우 합작에 큰 기대를 걸었던 듯하다. 즉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한민족의 참된 의사를 확인하고 한 데로 집결시켜 통일정부를

35) 소련으로서는 모스크바 결정에 충실함으로써 잘하면 탁치 이후 한국전체에 걸친 친소정권의 수립을 기대할 수 있었고 못돼도 이미 북한은 수중에 장악한 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 내에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찬·반탁의 국론분열로 인해 대소협상에서 확고한 입장표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36) 『선집』2, 「좌우합작의 정치적 의의」, 129쪽.

37) 『선집』2, 「민족위기타개일로: 좌우합작의 정치노선」, 134쪽.

수립할 것을 희구하였다.[38]

7월 25일부터 시작한 좌우합작회의는 좌익 5개항과 우익측의 8개항을 놓고 수차에 걸친 회의와 곡절 끝에 드디어 10월 7일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함으로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39] 좌우합작 7원칙은 해방정국에서 좌익과 우익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처음이자 마지막 합의문이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의 주장을 각기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도 해방정국의 주요현안들을 타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접근들을 통하여 이념적 간극을 최소화시키며 민족의 당면과제인 통일독립정부수립을 자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들이 제시된 것이었다.

이 같은 좌우합의 성공에 대하여 민세는 한성일보를 통해 "합작을 시작한 이래 반 년 걸려 간신히 나온 것이 '합작 7원칙'이요, 이에 부수하여 입법기관이 성립하려 하고 있다"[40]고 하며, 합작 원칙이 임시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방법을 안출하는 데, 즉 시국 수습의 열쇠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7개항을 해설하였다. 그중 중요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하여 민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합작 7원칙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꼬집어 신탁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데, 모스크바 협정 3항에 나오는 '조선 임시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단체를 참가시켜 조선 민족의 정치적·경제적 진보에 대한 원조와 협력(신탁)의 대책을 강구함'의 의미는 탁치가 실제로 상정되는 것은 임시 정부 수립된 이후의 일이므로 반탁 문제는 그 차후의 일이 될 것이니, 지레 근심할 바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신탁 통치와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문제에 대한 합의에 대하여도 그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 구조에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고 산업의 대종이 농업이었던 당시에, 토지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적산은 몰수하고, 사회 공익에 소관되는 법인 기타 이에 준할 공동 기관의 소유 토지는 국가가 그 수입에 상당한 다른 재원을 대신 주고 이를 회수하며(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은 자작 정도의 소유토지는 사유 경작케 하고, 소지주의 토지도

38) 한국사학회 편, 앞의 책, 179쪽.
39) 송남헌, 앞의 책, 378~379쪽, 합작 7원칙 내용 참조.
40) 『선집』2, 「합작과 건국노선」, 152 쪽

자기 경작량을 공제한 이상은 시가 전액으로 매상하며, 대지주의 토지는 역시 그 제한 소유의 면적을 제한 외에 누진적으로 그 토지 면적이 올라갈수록 그 대가를 체감적으로 국가에서 매상한다는 것이다.[41] 결국 토지의 세습 사유를 보장하되 경제 균등의 원칙에서 그 대량 독점을 제한하는 혁명적인 국책이라고 하였다.

한편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처리는 언제나 한 번 있어야 할 일로 입법 기구를 통하여 심리 결정한다"고 하면서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36년간 포악한 일제 밑에서 허다한 인물이 친일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민족 패류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나 일률로 친일파로 규정할 바 아니요, 모든 기술가·사무가, 기타 전문가와 또는 새로운 결심으로 건국 운동에 정진 분투하는 인물은 대체로 친일적 누명이 씻겨질 것이라 하여, 건국 사업에 공헌이 있는 자는 구제하고 오직 악질의 반역자는 공명 엄정하게 다스리되 이를 분변하여 되도록 최소한에 그치자고 하였다.[42] 좌우합작운동이 이렇게 결실을 보이자 제정파들은 대부분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족적 쾌거에도 불구하고 극우파와 극좌파는 이 결과를 맹렬히 반대했다. 이미 대화와 타협에 의한 화해와 조화의 원칙이 정당성을 잃고 있었다. 양 진영 모두에게는 한쪽의 완전 항복을 획득하는 그 순간만이 승리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었다.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는 약세화된 여운형 계열과, 한민당을 탈퇴한 원세훈 계열, 국민당의 안재홍 계열, 그리고 군소 정당과 사회 단체 밖에 규합하지 못한 채로 좌익과 우익의 파도 같은 협공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좌우합작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할 만한 결실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은 몽양이나 우사, 민세 모두 극우, 극좌파에 비해 적극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민족통일노선에 충실했던 민세의 노력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좌우합작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미군정의 과도입법의원이었다. 미군정은 이를 통하여 민주적 개혁을 실시하면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군정에 참여케 하여 민정 이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1946년 10~11 월에 45 명의 민선 의원을 선출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추천한 관선의원 45명을 임명하였다. 12 월 12 일에 개원된 입법 의원에 민세는 관선의원으로 피선되었고, 의장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

41) 위의 글, 152쪽.
42) 위의 글, 156쪽.

윤기섭이 선출되었다.[43] 이어 민세는 미군정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한다는 정책에 따라 민정장관의 제의를 받는다. 미·소 공위가 열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세는 미·소 협조는 멀어지고 남북 통일의 민주정부 수립이 늦어진다고 하면, 민정 수뇌부에 앉아, 한국의 독립을 원조하는 미국의 군정으로 하여금 민의에 가까운 정치가 되도록 협력하고, 남한의 민주주의 민족진영의 정치 토대가 바로 잡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애국자로서 사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민정장관을 수락했다.[44]

이로써 민족통일노선에 일관했던 민세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배경으로 한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정장관의 자리가 미군정의 예속된 자리인 만큼 민세의 활동에는 좌파에 대한 배려와 접근이 한계를 가질 수밖이 없었다. 그것을 알기에 민세는 우선 민족진영만의 일치단결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45]

4. 남북협상과 민세

1947년 5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차 미소공위는 한동안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6월 말경부터는 제1차 공위에서와 꼭 같은 암초에 걸리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47년 10월 20일). 민세는 민정장관으로서 미·소 공위의 성공을 바랬다. "세인은 미·소 공위의 협조를 비난하고 정치적 이단시하는 편도 있으나 그는 틀린 견해이다. 기동성을 띤 국제적 정치 노선은 고집 불통하는 정체성을 허용치 않는 것"[46]이라 하여 이미 고착되어 가는 양극체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세의 우려대로 미소의 양극체제는 점차 강경방향으로 나아갔고 국내적으로도

43)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입의(立議)는 처음부터 좌우 협공의 험악한 기류 속에 크지 못한 출발을 하였다. 합작의 좌방 수석인 여운형씨는 민주의원 당시의 태도대로 종시 불참하였고, 김규식 박사도 자신은 불참을 상당 고집하였으나 형세 그리 될 수 없었고, 나도 동지를 보내고 자진 사퇴키로 하였으나 사정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선집』2, 「민정장관을 사임하고」, 275쪽

44) 『선집』2, 「백범정치투쟁사」, 442쪽

45) 물론 이러한 민세의 의도마저 당시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 민세는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고 우익이나 좌익 모두로부터 공격당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46) 『선집』2, 「미소공위의 불성공과 시국대책」, 193쪽

분위기는 민세의 편이 아니었다. 특히 민세가 속했던 한독당은 미소공위의 참석여부를 놓고 참석을 주장하는 국민당계와 불참을 주장하던 해외파로 대립되던 가운데 6월 19일 국내파가 대량 제거되고 말았다. 결국 민세는 독자적으로 신한국민당을 창당했다(6월 21일). 그리고 김규식과 여운형, 홍명희 등과 함께 중간파의 입지를 넓히는 작업을 해 나갔다. 민세가 판단한 정국은 이제 극우, 극좌파를 배제한 중간파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신조국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미소공위의 결렬에 이어 미국측은 한국문제를 UN으로 넘겼고, 소련측은 양군철퇴안으로 이에 대응했다. 즉 미국은 UN의 이름으로 한국에 친미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했고, 그것은 소련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 소련측은 이에 맞서 양군이 철퇴하는 조건에서 한국인 스스로 정부를 수립토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UN을 앞세운 미국의 정책에 대응했던 것이다.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했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의 포기이고, 이는 곧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준비된 각본에 의한 정책변화의 시사였다. 루즈벨트의 구상이래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국에서의 신탁통치를 통한 반공전위국가의 건설은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제 남쪽에서 만이라도 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UN은 미국의 제의를 압도적으로 가결했고 1948년 1월 8일 UN한국임시위원단은 서울에 도착했다.

백범은 처음 한국문제의 UN이관에 크게 환영했으나 차츰 분위기가 단선, 단정수립으로 흐르자 1월 28일 UN한국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미·소 양군철수하에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 및 이를 위한 남북지도자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백범에게 있어서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은 민족분열일 뿐만 아니라 UN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에 의한 신탁통치였고, 세워질 남한 정부는 반드시 미국의 예속 아래 들어갈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백범의 인식에 같이한 인물이 국내 중간파를 대표하고 있던 김규식이었다. 2월 4일 민세가 소속된 민족자주연맹은 남북통일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협상을 북쪽에 요구했다.

민세는 4월 3일 한성일보의 사설을 통하여, " 가까이 그 실현이 기대되는 남북정치협상은, 그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알력과 반목만을 거듭하여 온 좌우양익의 정치지도자가 일당에 회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진다는 그 자체에, 또 그것을 통하여 종래의 사대의타적인 오류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앙양할 계기를 짓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47]하고 협상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록 낙관은 불허하니,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결과가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완전 독립의 위대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각각 소아병적인 독선을 버리고 겸허와 호양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민족통일노선에 시종일관했던 민세로서는 당연한 기대이고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세는 남북 협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내심 협상이 성공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다. 김구를 회상하는 「백범정치투쟁사」에서 "....4월 18, 9일 경 백범, 남북 협상에 참가코자 북행을 하신다고 하므로 '참으로 월북을 하시는가. 그 전망이 어떠한가. 월북 이후 백범 자신의 진의와는 배치되는 헛선전이라도 남한에 전파되는 경우 그 진부를 표준할 만한 기본 원칙을 미리 선포하여 두고 출발하심이 가하겠다'고 진언하였다. 백범은 그러한 성명을 남겨 두고 떠나셨다"[48]고 술회하였다. 북행을 단행한 양 김은'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에 참석했다. 특히 남북요인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하여 외국군의 즉시철군, 철군후 내전발생 부인, 임시정부 수립과 그 정부하의 총선거실시로 통일민주정부수립, 남조선의 단선 불인정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북협상에서 합의한 외국군의 철수문제가 미국측의 정부수립후 철군안과 소련측의 양국군 동시 철수안으로 대립되고 있을 때 5월 10일 남한에서의 단독선거가 실시되어 버렸다. 그러자 북측에서도 준비된 대로 단정수립을 위한 단계를 밟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한 9월 9일 북조선 단독정부를 수립해 버렸다. 결국 남북협상은 비현실적인 무모한 시도였다. 그러나 백범의 표현처럼 그것은 정도냐 사도냐의 문제였다. 5월 10일 단독선거에 좌익은 물론 김구등 남북 협상파에서는 참여를 거부하였다. 민세는 이 남한만의 총선거에 각 세력의 참가를 주장하였다. 민세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진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북 협상 당시 선배와 동지들이 남한 선거를 거부치 말고 그 산하의 인물들

47) 『선집』2, 「남북협상에 기함」, 254쪽
48) 『선집』2, 「백범정치투쟁사」, 447쪽

> 로 대거 참가케 하였던들 오늘날 의정 단상 다수의 투쟁과 함께 통일 공작의 동지로 하여금 대다수를 옹유(擁有)하여 자못 신축 자재한 기동적인 작전을 하였을 것인데, 그 오류는 이미 추급할 수 없고, 역시 다만 간과지인(看過知人)의 탄을 발할 바이다.[49]

민세는 백범 등이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을 실현코자 한 나머지 남한선거에 참여치 않은 사실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다. 민세는 1949 년 3 월에 쓴 「남북 통일의 구체적 방책」이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써 정식 승인된 것은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 자유 국가로서 통일 독립됨의 타당성을 국제 열국이 공인 지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족적 경사이다"[50]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10 선거가 끝난 후 국회 개원과 함께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절차가 진행되어 가자 민세는 6 월에 민정장관을 사임하고 한성일보 사장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민세는 2 대 국회의원 선거인 1950 년 5 월 30 일 고향인 평택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었다. 가능한 내에서의 민족통일노선을 실현하고자 했던 최후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6·25 는 그런 민세의 민족통일노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IV. 신민족주의 국가건설론

1. 초계급적인 통합민족국가의 이상

민세의 신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좌우파간의 이념대결과 계급투쟁이 지양되어야만 민족적 통합과 자주독립이 가능하다는 자각 하에, 이념대결과 계급투쟁을 지양할 수 있는 제3의 이념으로서 제창된 것이다 그의 신민족주의는 '통일민족국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안으로는 '만민개조'와 '대중공

49) 『선집』2, 「조선민족의 정치적 진로」, 318쪽. 그러나 민세도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거를 주관해야 할 민정장관의 위치였고 무엇보다도 민족통일노선에 의한 정부수립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실망에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50) 위의 글, 182 쪽.

생'을 원리로 하여 계급독재를 지양시킨 초계급적 전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고, 밖으로는 자주독립의 도태 위에 '인류대동'의 국제협동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신민족주의가 한민족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국제적 객관조건과 고유 문화적 전통에 맞는 것이며, 동시에 세계인류의 양심과 변화추세에 부합·부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51]

> 서구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대개 궁정을 중심으로 한 봉건귀족과 대지주의 자본가 등이 최초부터 특권벌적 독점으로 천하의 정권을 농단하며 계급적인 억압 착취를 하다가, 시대의 진운에 따라 한 걸음씩 소시민·노동자 및 농민 등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 그 정치 참여의 법을 할양한 소위 자본적 민주주의로 된 것이요, 그러한 사회적 기반 위에 구성된 민족주의로서 그 발생 및 발전의 역사가 거의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인은 이제 동일 예속과 동일 해방에서 모든 진보적이요, 반제국주의적인 지주와 자본가와 농민과 노동자가 한꺼번에 만민 공생의 신발족을 함을 요청하는 역사적 명제하에 있으므로 만민공동의 신민족주의요 신민주주의이다.[52]

이처럼 민세가 구상한 신민족주의는 서구식의 민족주의가 밟아온 봉건 귀족·대지주·자본가 등의 역사적 발생·발전의 성격과 다른 초계급적 균등 사회의 이성 위에 서는 주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주의는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고대 이래의 조국 고유, 민족 자발의 민족주의·국민주의·민주주의의 제이념과 꼭 합치된다고 보아 현대적 의의에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53]

그는 국가의 권력과 부가 지주와 자본가 등 소수 특권계급에게 독점되어 착취와 피착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계급간에 투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생겨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민족성원간에 동일운명의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자체가 균등사회·공영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54] 이처럼 신민족주의론은 해방후 이상적 국가건설을 이루는 내부통합과정의 방략이

---

51) 정영훈, 앞의 논문, 167~168쪽.
52) 『선집』2,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50쪽.
53) 위의 글.
54) 『선집』2, 「역사와 과학과의 신민족주의」, 242쪽 참조.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세가 이상적 통합국가로 상정하는 국가는 모든 계급적 이해를 초월하는 '초계급적 국가'이다. 즉, 신민족주의의 건국이념은 우리는 일제 기간동안 "초계급적으로 정복되어 압박착취되었고 다시 초계급적으로 해방되었으니, 초계급적 통합민족국가 건설은 이 역사적 엄숙한 사실의 냉엄한 논리적 요청"55)이며 이는 대단히 시급한 민족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방정국에서 서둘러 "모든 진보적이요 반항 침략제국주의적인 지주와 자본가 및 농민 노동자 등 근로층 인민과를 통합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족주의는 초계급적·전민족적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좌파이론들의 경우처럼 그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정의 운동주도 계급을 상정하지 않는다.56) 그렇기에 우선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극좌적·극우적 계급독재가 배격돼야 한다고 본다.

민세는 서구정치사에서 발전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자본적 민주주의"가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가 점진적으로 할양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이데올로기임에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혹은 신분적 특권의 횡포의 제거를 보장하거나 실천하는데는 큰 약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한국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방된 점에서 그리고 모든 사회계층이 "진보적"이고 "반제국주의적" 차원에서 새로운 독립국가건설에 참여해야 할 해방 직후의 한국상황에 적절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소련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이즘에 입각한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57) 첫째, 현금의 국제정치상에 존재하는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이다.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은 개인의 생래(생래적 자유권)을 무시하며,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원칙아래 조작된 다수결에 복종해야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일원화는 파쇼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

55) 위의 글, 55쪽.

56) 그는 신민족주의 통일조국건설 이념에 공감하는 모든 양심세력을 운동세력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모호성은 신민족주의가 강력한 지지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영훈, 앞의 논문, 168쪽.

57) 정윤재(2000), 앞의 논문, 13 쪽.

둘째, 공산주의가 하나의 순수한 주의나 사상운동으로 미래의 정권을 지향하면서 노동자·농민대중의 경제적 평등을 주장함에는 많은 호의와 공명을 갖는 바이지만, 그것이 현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무산자 계급의 독재를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본계급의 특권도, 무산계급의 특권도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계급이 층생치 않도록 입권·치치하는 것이 신민주주의의 이념이요 정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영구한 우호친선관계를 유지하려면 관계국 상호간에 완전자주독립의 입장이 확립돼야 하는데, 한소(한소친선)의 확보가 요청되는 장기적인 정책전망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에 공산주의정권이 설립되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소련의 지지와 후원에 의존하여야 할 것인즉, 그렇게 되면 양국가는 종속관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58]

민세는 이같은 정치목표들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의회제도와 민주적인 입법수단에 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본다. 그의 신민족주의론은 '폭력에 하소하는 계급투쟁'을 지양·청산하고 전민족이 협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표방하는 만큼, 당연히 쟁점들을 피흘리지 않고 의회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입법수단'으로서 해결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고 있지만 그 전환은 '유혈을 보지 않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이룩한' 영국의 예를 따라 '진보주의적 점진의 방식'으로 이룩돼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본다.[59]

이처럼 민세가 주장한 초계급적 국가는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을 지양 청산하고, 모든 계급독재를 배격하는 것이며, 나아가 초계급적 초당파적 회통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60] 특히 초당파성이란 당시 난립하던 정당의 홍수에 대한 민족단일당에 대한 그의 염원이 담겨 있는 개념이다. 그는 이미 일제하에서 신간회의 일을 보면서 민족운동이라는 대의 앞에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국민당이 내걸었던 일당치국의 개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식민지 시기부터 협동단일당론자였으며,[61] 해방 이후에도 몇 개의 당이

58) 『선집』2, 「한민족의 기본진로」, 358 쪽.
59) 정영훈, 앞의 논문, 169쪽; 『선집』2, 「한민족의 기본진로」, 346, 349 쪽.
60) 김인식,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의 이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0집(1998), 474~479 쪽 참조.
61) 김인식, 「식민지시기 안재홍의 좌익민족주의운동론」, 『백산학보』, 43호(1994), 190~195 쪽.

존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모든 사상의 대립을 지향하여 일당으로 통합된 전민족단일당을 이상으로 지향하였다. 이런 의식 하에서 초계급적 통합민족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위정당으로 만든 것이 국민당이었다.

2. 민족통일의 국가건설론

민세가 지향하는 초계급적 통합국가는 신민족주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계급적 기반은 중소지주, 중소자본가, 노동자, 농민을 포괄하는 '국민'이었다. 그가 창당한 국민당의 명칭은 이처럼 전민족적 차원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당은 "극좌, 극우를 모두 배척하고 국력을 통합하여 신민주주의의 새나라를 세우자는 중앙당"[62]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민세는 국민당을 통하여 민족통일의 국가건설을 이루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는 「국민당 선언」[63]에서 "우리는 초계급적인 전민족적 피압박의 형태에서 항전하여 왔고, 다시 전민족적 해방의 단계에 들어있어, 초계급적 통합 국가 건설의 역사적 약속 아래에 있으므로 모든 진보적이요 반항 침략 제국주의적인 지주와 자본가와 및 농민 노동자 등 근로층의 인민과를 통합한 신민족주의의 국가를 창업하여, 만민개로와 대중 공생을 이념으로 하는 계급 독재를 지양시킨 시민주주의의 실행을 목표로 한 정치적 문화적 신기원의 역사를 개창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조선의 신민족주의는 안에서 민족 자존의 협동체요 밖에서는 국제협동의 분담자로서의 공고한 민족 국가를 보유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민족, 민권, 민생의 분별을 모름짓지 않고, 스스로 만민공화, 대중공생의 대경대법으로 되는 바이다"고 하였다.

민세가 구상한 통일민족국가의 모습은 그가 해방 직후부터 민정장관으로 미군정에서 일할 때까지 줄곧 견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은 국민당의 강령[64]·정책·정강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이 사회개혁프로그램은 친일분자의 처

62) 『선집』2, 「중앙당으로서의 건국이념」, 83~87쪽.

63) 『선집』2, 「국민당선언」, 62 쪽

64) 국민당의 강령: 1. 민족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협력의 최선의 분담자가 됨을 기함. 2. 국민개로와 대중 공생을 이념으로 신민주주의 실현을 기함. 3. 민족 문화의 전면적 앙양과 인류 대동의 조류에 순응키를 기함. 위의 글, 63쪽; 『선집』2, 「국민당의 정강·정책 해설」, 66~67쪽.

리, 토지개혁, 산업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 국방, 문화부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국가 건설의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하겠다. 국민당의 강령과 정책을 중심으로 민세가 구상한 신생국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 민세는 "의회제도를 수립하여 만민이 정치에 참여케 하되 일정연령의 남녀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향유를 기한다" 고 하여 의회제도의 수립은 민주주의 정치실현의 필수 방식이기에 만인이 정치에 참여케 하는 것은 빈부와 직업 그리고 성의 차이를 두지 않는 민주주의 정치의 통측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국민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병역제도에 있어서 국민개병제에 의한 국방군의 즉시 편성을 추진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국민의 최대의무로 삼아 시급한 국방력 확보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치적으로 민세는 철저한 의회민주주의 신봉자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민세는 미소공위에 제출한 문서에서 향후 신생조국의 정체를 "국민의회를 최고권력기관으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 민주공화국"[65]을 제시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선 전국민적 관심사 였던 토지개혁은 일단 정부가 일본인과 일본인 기관에 의해 소유되었던 토지를 모두 접수한 다음, 필요한 재정적 조치와 함께 농민들에게 유상분배되어야 한다. 즉, 토지분배의 규모는 대상 농가의 규모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토지대금은 가능한 최대의 기한으로 최저의 이율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은 국가건설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농민들에게 이렇게 제공된 토지는 일정기간 동안 팔 수 없어야 되며, 외국인은 토지의 매매 혹은 소유의 주체에서 제외한다. 이는 급격한 토지개혁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지주들에 의한 토지독점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상속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의 편재현상을 억제해야 한다. 불로소득과 부동산투기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이것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며 국민

65) 『한성일보』, 1947. 7. 11.

개로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개혁조치를 과단성 있게 추진할 경우 자연히 정부에 의한 국민사회·경제생활에의 "심각한" 간섭 내지 규제가 필연적인 바, 이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재판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66]

한국의 경제적 제조건이 서방선진국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이 아무런 수정 없이 시행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은 국민들의 선택과 참여로써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의 지도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대외무역은 정부기관에 의해 통제와 융통성 있는 보호관세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의·식·주, 교통, 국방 등과 관련된 주요기간산업은 국유화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산업은 일본·노르웨이와 아울러 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할 만하다고 하고, 한편 '도시·항만·철도·도로와 하천·지당·농지·임야 등의 신조선 건설에 적응한 국토 계획을 촉진함은 일대 건설적 국책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를 주관할 기획원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놀라운 식견을 보여 주고 있다.[67] 즉, 해방 조선은 후진 농업국가이지만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정부주도 하에 5개년 혹은 10개년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업화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것을 관리할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생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었을 것이다. 민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도 바로 경제문제였다. 그의 경제관은 만민공생의 균등경제였다. 이를 위해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의 편재나 독점을 막고자 했다.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의 국유화 정책을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또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동해야 하는 국민개로의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간의 규정, 미곡가 정책 등을 입법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회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친일파의 처리문제가 중요했다. 온건 우파였던 민세는 그들을 과격한 방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민세는 친일분자의 처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6) 정윤재(2000), 앞의 논문, 17 쪽

67) 한국사학회 편, 앞의 책, 167~168쪽 참조.

다만 처벌의 범위는 아주 극악하고 비민족적인 행동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했다. 예컨대, 기술자, 공무원, 특수기능직 종사자 등과 같이 일제하 식민지정부를 위해 오로지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분류되어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68] 이밖에도 노동대중의 향상을 위하여 최저노동임과 최고노동시간을 설정하고 유년노동 금지하고 공장노동은 8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책임제의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기하고 학술연구기관의 확충을 도모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위생·부양 기타의 사회시설의 완비를 기한다고 제시했다.

문화적 측면에서 민세는 신생조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즉, 지력의 향상을 통해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교육문화의 균등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초등국민교육에서 국가책임제의 의무교육의 실시와 실과교육,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문맹퇴치와 사회교육의 실시 보급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절름발이 상태에 있는 전통민족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구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우리의 민족문화와 고유도덕을 순화앙양함은 곧 인류대동의 조류에 순응해 세계문화에 교류 조합함을 의미했다.

민세가 추구하고 이상적 국가로 상정한 것은 민족통일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념성을 배제한 초계급적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했고 또 시급한 민족통합을 위해 민감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토지개혁, 빈부격차 해소, 친일파 처리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점진적인 해결을 이루고자 시도했다. 그렇기에 그의 신민족주의론과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를 혼합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세사상이 가지는 큰 특성은 정책들이 고착되거나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민세 스스로 말했듯이 그의 정책들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69] 해방정국에 출현한 대부분의 정당들의 이념이나 정책이 경직되어 융화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은 모두가 파멸을 맞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민세의 유연성과 융통성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적인 사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68) 정윤재(2000), 앞의 논문, 17 쪽

69) 『선집』2, 「국민당의 정강·정책 해설」, 66쪽.

V. 결론

민세 안재홍의 노선과 사상은 해방정국의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초지일관 민족통합을 위한 '초계급적 통합민족국가' 건설에 충실했다고 평가된다. 이를 위해 그는 현단계를 계급투쟁이 아닌 민족투쟁의 단계로 인식해 진정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전민족적 총화단결만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세의 인식에 이론화 된 것이 그의 신민족주의론이었다.

그의 신민족주의론은 흔히 서구의 민주사회주의사상[70] 혹은 사회민주주의사상[71]과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민세는 신민족주의론은 거듭 기성의 정치사상을 본뜨지 않고, 조선의 고유한 정치철학과 객관현실에 기원과 배경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중의 때문의 주의요, 주의의 때문에 생긴 대중이 아니다. 주체라는 추상적 존재를 위하여 대중의 이해와 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하여 기존의 형식적 틀에 맞는 주의를 거부했다. 즉, 조선의 역사와 상황에 맞는 주의의 출현이 필요한 것이지 서구의 이념적 틀에 우리의 상황을 맞추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72]

실제로 민세의 신민족주의론은 일제시대의 오랜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일제하 좌우합작의 운동단체였던 신간회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민족운동 진영 내의 이념적·계급적 분열을 막는 민족유일당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랬기에 민세의 노선은 해방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건준 참여, 국민당 창당, 좌우합작에의 참여, 민정장관직 역임 등 전민족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에 진력할 수 있었다. 그랬기에 그의 신민족주의론은 사회통합과 사회균등을 강조한 민족주의로서 사회적 민족주의로 평가되기도 한다.[73] 또한 신민족주의론은 한국사상의 특성을 계승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

---

70) 유병용, 「안재홍의 정치사상에 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편, 『한국민족운동사연구』(1)(지식산업사, 1986).

71) 김인식(1998), 앞의 논문.

72) 민세는 "미국의 민주주의나 중국의 민주주의가 아니요 소연방의 정치가 그대로 조선의 정치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신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도 아니요 손문의 삼민주의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신민주주의의 이념」, 김인식, 「신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1호(2000), 120쪽 재인용.

다. 민족의 삶의 문화양식은 고유한 틀을 형성한다. 특히 정신적 사유의 세계는 그것을 관념화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을 거쳐 하나의 고유한 사상체계로 만들어져 민족이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한국적 정신문화 역시 동양적 복합 변증법적인 합의 지향[74]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오늘의 한국사상으로 구상화된 것이다.[75]

이러한 한국 고유의 사유체계는 국난의 위기에서 마다 역할을 다하니 삼국통일의 혼란을 극복한 원효의 화쟁사상이나 고려불교의 교·선갈등을 통합시킨 보조국사 지눌의 교관겸수, 정혜결사운동, 조선 성리학의 오랜 당파성을 극복해 조선특유의 유학을 완성한 퇴계, 율곡의 학문 그리고 근대 말의 동학사상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사상은 결코 별개로 각 시기에 창출된 이념일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민족에게는 이미 그 같은 사고가 전제되고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세 역시 신민족주의론은 "조선정치철학"에서 한민족 고유의 철학적 사유를 준거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초계급적 통합국가'은 한국의 과거역사 및 근대적 경험들은 물론 서구의 역사경험들에 대한 세심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상적 국가건설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민세의 민족통일노선과 신민족주의론이 지향하는 세계가 민주주의 완성과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오늘의 우리 과제와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반세기 전 민세의 실패는 그대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과 남북대립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세가 고민한 민족과 세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 민족생존과 번영 그리고 인류공영이라는 과제 해결의 단초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

73) 정영훈은 여기서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신민족주의를 대표적인 사회적 민족주의로 규정한다. 정영훈, 앞의 논문, 180~181쪽 참조.

74) 김영두, 『한국정치사상사·동서정치사상사』(한국정치사상연구원, 1987) 영인본 참조.

75) 현상윤은 우리민족의 출발이랄 수 있는 神市에서 한국사상의 기원을 찾고 있다. 즉, 신시에서는 4개의 축이 만나고 있다. 하늘이 만물에 베푸는 은혜, 아비가 아들에게 가지는 사랑의2 축과 사람이 하느님을 섬기는 공경,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효의 2축이 만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화친과 인애, 책임과 질서가 유지되는 제정일치의 사회가 형성된다. 이 신시의 사고야말로 한국사상의 평화 지향적인 화합적 사고의 출발점이다고 보는 것이다. 현상윤, 『조선사상사』(민족문화사, 1986) 영인본, 13~14쪽.

> 해방은 남의 손으로 되었지만, 민족전선의 통일조차 만일 또 남의 손을 빌려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주독립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입이 없을 것이다.[76]

참고문헌

『한성일보』.

김광식, 「해방직후 여운형의 정치활동과 건준, 인공의 형성과정」.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1985.

김영두, 『한국정치사상사·동서정치사상사』. 서울: 한국정치사상연구원, 1987 영인본.

김인식, 「식민지시기 안재홍의 좌익민족주의운동론」. 『백산학보』 43호, 1994.

_____,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의 이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_____, 「신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검토」. 『정신문화연구』 23권 1호, 2000.

송남헌, 『해방 3년사』 I. 서울: 까치, 1985

안재홍선집 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서울: 지식산업사, 1981~2004, 1~7.

유병용, 「안재홍의 정치사상에 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6.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2000.

정영훈,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이론」. 『정신문화연구』 15권 3호, 1992.

정윤재,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 국가론: 정치적 비젼과 실천전략」. 한국정치학회, 『정치리더쉽 기획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0, 9.

_____,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민세 안재홍 평전』. 서울: 한울, 2002.

진덕규, 「김구의 임정을 거부한 미군정」. 『한국논단』 1992, 5월호.

최장집, 「한국민족주의의 특징」.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신서, 2001.

한국사학회 편, 「민세 안재홍」. 『한국현대 인물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7.

현상윤, 『조선사상사』. 서울: 민족문화사, 1986 영인본

Smith, Anthony D.,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1995.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76) 『선집』2, 「중앙당으로서의 건국이념」, 83쪽.

Regimes 1945~1947 .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Berlin, Isaiah, *Against the Current: Essays in the History of Idea* . New York: Viking, 1979.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4.

◉ 주제어(keyword) : 민족통일노선(national unification line),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 중도파(middle roaders),
초계급적 통합민족국가(super-classes unification national-state),
사회적 민족주의(socialistic nationalism).